

5. 지방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지난 '99년에 시행한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났으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홍보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업추진 경험과 관행, 업무처리절차,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 그 다음이 사업추진 실행시스템과 미흡과 전문가의 부족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부터 사업추진 경험의 부족, 전문가 부족 등 민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하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추진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자치단체장들의 해외투자설명회가 2, 3년 전부터 붐을 이루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사업은 일부 환경관련시설들 뿐이다. 이처럼 민자사업 추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

는 데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앞의 실패요인에서도 밝혔듯이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가 자리잡고 있고, 관련 제도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우는 너무 많은 사업을 계획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다.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국 투자자들과 체결하는 투자협정서 투자의향서이다. 대부분은 투자협정서를 체결하면 곧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성공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손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투자의향서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출발점이기기는 하나 투자의향서는 어디까지나 투자의향서일 뿐이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의 전제가 되는 수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투자의향서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그 사업을 쳐다보고 분석해 보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